

1970년대 한국 자주국방정책 연구

- 대통령 기록관 국방·안보관련 보고 문서를 중심으로 -

박 봉 수*

1. 머 리 말
2. 자주국방정책의 모색(1968~1970)
3. 자주국방정책의 발전(1971~1975)
4. 자주국방정책의 심화(1976~1979)
5. 맺 음 말

1. 머 리 말

1960년대 말부터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집중적으로 형성된 한국의 자주국방론은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정책에 반영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었다.¹⁾ 본 연구의 목적은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되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 석사 졸업

-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구분된다. 먼저, 유신체제를 유지·강화시키려는 통치이데올로기 중의 하나로서 자주국방을 추진하였다는 국내 정치적 입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의 약화에 따른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으로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국외적(대북용) 입장이다. 조철호, 「박정희의 자주국방과 핵개발」, 『역사비평』 제80호, (서울: 역사비평사, 2007), pp.357~358. 본 연구에서는 자주국방의 추진 배경을 후자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더불어 국내적으로 국가지도자와 국가 엘리트들의 자주국방 추진의지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있던 국방·안보관련 문서²⁾를 통해 자주국방정책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1970년대 국가지도자와 엘리트들이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의 한국 자주국방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68년을 기점으로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추진된 한국의 자주국방정책을 모색·발전·심화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전개 양상과 특징을 평가할 것이다.³⁾ **모색기**는 1968년 이후부터 1970년까지 각종 대외 위협으로부터 박정희 정부와 국가 엘리트, 그리고 국민들이 자주국방을 각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발전기**는 1971년부터 1975년까지 주한미군의 철수, 월남의 패망 등에 따라 '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육곡계획' 등으로 자주국방정책이 발전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이다. **심화기**는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북한의 8·18 도끼만행사건,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등에 따라 자주국방정책이 심화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별 구분뿐만 아니라 각 시기를 대내외 안보상황과 대응, 자주국방의지, 자주국방능력으로 세분화하여 1970년대 자주국방정책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평가해 볼 것이다.⁴⁾ **자주국방의지**는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국가지도자와 지도층,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들을 말하는 것으로, 안보관련 정책추진과정, 군사전략의 수립, 전력증강위원회 운영 등으로 살펴보았다.

2)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문서를 1차 사료로 택한 이유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함이다. 실제로 국방과 관련된 당시 대통령 보고 문서를 살펴 본 결과 기존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내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3) 국방부에서 발행한 공간사인 『국방조직변천사』(1992)와 『간군 50년사』(1998)에서는 한국의 자주국방 시기를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전기'로, 1990년대까지를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1972년부터 1980년까지는 '자주국방조성기'로, 1981년부터 1990년까지는 '자주국방강화기'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로 한정하였고 그 시기를 다시 세분화하여 1970년대 한국 자주국방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4) 민병천은 자주국방을 '자주국방의지'와 '자주국방능력'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즉 자주국방이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완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갖춘 국가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위한 자국의 의지가 뒷받침 되어 설명되었을 때 그 개념이 보다 명확해 진다는 것이다. 또한 1970년대 한국의 국력을 감안했을 때에도 자주국방의지와 자주국방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병천, 「자주국방의 개념과 한국적 적용문제」, 『국방연구』 제30호, 1971, p.15.

자주국방능력은 자주국방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난 능력으로, 한국군 현대화계획, 방위산업 육성, 율곡사업, 유도탄 및 핵개발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적 안보상황에 따라 박정희 정부와 국가 엘리트들이 자주국방달성을 위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현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자주국방정책의 모색(1968~1970)

(1) 대내·외 안보상황과 대응

1966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는 1967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1966년보다 도발건수가 약 10배 증가되었다.⁵⁾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1968년 이후 극에 달했고 그로 인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위기감은 증대되었다. 특히 1968년의 청와대 기습 사건과 미국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일제 식민지와 6·25를 경험한 당시 한국의 기성세대는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국가안보의 불안한 현실을 느끼게 하였다. 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매우 우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⁶⁾

한편 1969년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월남전의 장기화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유럽방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시아

5)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위원회, 『국방사』 제3집(서울: 서라별인쇄주식회사, 1990), p.44.

6) 그 근거로 한국 정부와 국방부, 여당 합동회의, 국회 외무위원장, 공화당 대변인, 중앙대 학생 50여명 등이 미국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만을 북한과 비밀 회담을 통해 유화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였다. 실제로 당시 이러한 분위기는 1968년 2월 6일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의혹이 한미 간의 긴장으로 표출될 단계에 있다고 보도되었다. 류길재, 「1960년대 말 북한의 도발과 한미관계의 균열」, 한국학 중앙연구원 편, 『박정희 시대 한미관계』(서울: 백산서당, 2009), p.212.

각국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정책의 변화를 수립하였다. 취임 이후 닉슨은 안보담당보좌관 키신저(Henry A. Kissinger) 박사와 함께 1970년대 미국의 국력과 전 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 노선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닉슨의 세계전략 구상과 대아시아 정책방향은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알려졌다.⁷⁾ 당시의 한국 정치지도자들이 닉슨독트린을 얼마나 심각한 안보위기로 받아들였는지는 1970년 7월의 긴급각료회의 내용과 주한미군철수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것에서 확인된다.⁸⁾

이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안보위협과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여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힘겨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정희 정부는 1968년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였고, 외교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끝에 미 의회에서 특별 군원 1억 달러가 통과됨으로써 장비증강, 군수산업기반조성, 공군력강화 등 국군 현대화계획을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자주국방의지의 공감대 형성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1963년 발족되어 국가안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1964년에서 1969년까지는 월남파병에 관한 문제와 환율개정에 따른 당면 경제정책, 각종 간첩사건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1970년대에는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대내·외적 안보위협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안보문제와 대응책에 대해 분석·토의하였다.⁹⁾ 1970년 2월 4일 국가안보사무국은 '국가안보 제1차 축

7) 우승지, 「테탕트 시대의 한미관계」,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 정치와 외교: 1945~1979』 (서울: 성신여대 출판부, 2005), p.394.

8) 당시 긴급각료회의에서는 닉슨 독트린에 대해 '한국의 안전을 도의시키고, 미국정부가 국내사정을 이유로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자유우방국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정영국, 「유신체제 성립 전후의 국내정치」, 한국문화정신연구원 편,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p.212.

9) 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 30년사』 (서울: 성진문화사, 1999), p.77.

소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북한의 공중기습에 관한 대비책 등에 관한 토의였다. 당시 국무총리는 적의 공중기습에 대한 대비책 강구의 시급성에 비추어 내무부와 국방부는 방공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국가안보사무국은 방공 경보망의 일원화와 자동화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안보 축소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저공침입에 대한 방비책으로서 공군이 중심이 된 방공 경보망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내무부장관은 관계법을 개정하여서라도 향토 예비군의 방공 분야에서의 활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¹⁰⁾

이어서 2월 19일, 국가안보 제2차 축소회의에서는 '민방공 경보망 개선계획'에 대한 합의사항을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경보망의 경우 체신회선에 부가장치를 신설하고 오산의 ADCC에서 각 시·도에 사이렌을 직접 취명토록 하며, 무전식 경보전달 체제인 SSB망을 보강하여 체신선 장애 및 수도권 이동시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방공의 책임 소재는 내무부장관이 담당하고 경보발령은 국방부 장관의 소관으로 하였다. 또한 민방공을 위해 향토예비군의 활용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¹¹⁾ 3월 4일, 국가안보 제3차 축소회의에서는 전쟁 지도본부 지하화계획에 대해서 토의하였다.¹²⁾

한편 1970년 4월 8일에 국가안보사무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3월중 국가안보주요업무'에 따르면 당시 설정된 연구과제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안전보장', '핵전에 대비하는 군사전략의 확립', '아시아 주변지역의 정세 전망과 대책', '한국 군사력의 전략적 검토', 그리고 '70년대 한국

10) "국가안보 제1차 축소회의 내용(국가안보사무국장 보고, 1970.2.14)", EA0004296,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11) "국가안보 제2차 축소회의 내용(국가안보사무국장 보고, 1970.2.23)", EA0004299,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12) "국가안보 제3차 축소회의 내용(국가안보사무국장 보고, 1970.3.9)", EA0004304,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이 문서에서는 전쟁 지도본부 지하화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나 당시까지 미착수되고 있던 지하화 계획은 일반 보류하고, 국가안보사무국이 국방부, 과학기술처와 협의하여 지하시설 계획의 ① 기본형 구상, ② 위치, ③ 예산책정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보의 문제점' 등이 있었다. 이후 1970년 12월까지 매월 이러한 내용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4월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가 진행되었는데, 추가된 내용은 '한·미·일 관계와 한국의 안보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5월에는 '북한 간접 침략의 종합적 검토'가 추가되었고, 6월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정책 지침 보완'과 '일본의 군비증강과 전망'이 추가 보고되었다.¹³⁾

당시의 안보관련 연구과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국가안보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사무국의 활동이 활발하였고 안보관련 제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¹⁴⁾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종 연구과제를 국방대학원 등의 외부기관에 위탁·연구토록 하여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한국군 현대화계획과 자주국방능력 초석 마련

박정희 정부는 한국군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적인 협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1968년 4월 25일에 미국이 한국군에 M-16 소총의 공급과 5월에 탄약 공장 설치에 협조할 것을 합의하였다.¹⁵⁾ 이어서 11월 2일에 정무비서관이었던 장상문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 국방성 국제안전담당 차관보 Mr. EARLE과 M-16 소총 및 탄약공장 설치관련 회담에서 특이할 만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임충식 국방부장관이 Mr. EARLE에게 소총 및 탄약공장 설치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필요성, 한국의 계획과 투자방법, 북한의 무기생산실

13) "3월중 국가안보 주요업무보고(1970.4.8)," EA000432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이 외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총 7건의 보고 자료가 있다. 4월(EA0004330), 5월(EA0004344), 6월(EA0004358), 7월(EA0004383), 8월(EA0004385), 9월(EA0004393), 10월(EA0004409), 11월(EA0004414), 12월(EA0004419).

14) 일례로, 1970년 5월 5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례 안보 상황보고 회의 개최" 건의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군사 동향, 전·평시 업무중 중요 조치사항 및 비상계획 등 일련의 안보 업무에 관해 관계 부처 책임자와 대통령이 매월 1회 모여 토의함으로써 안보 업무를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정례 안보 상황보고 회의 개최(1970.5.5)", EA0004328,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사료.

1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사연표(1945~1990)』 (서울: 군인공제회, 1994), p.326.

정 등을 강조 설명함으로써 Mr. EARLE는 회의적인 태도에서 동조적인 태도로 바뀌었다.¹⁶⁾ 당시 브리핑된 'M-16 소총공장 설치계획'에 따르면 북한이 소화기뿐만 아니라 중화기, 탄약, 폭약 등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군은 성능과 체질에 적합하지 않은 M-1 소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최소한 북한보다 우세한 소화기 화력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소총공장의 설치에 한국에 있어서 기본화기에 대한 '자조적 지원능력'을 구비케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한국 국내에서 소화기를 생산함으로써 미군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한국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¹⁷⁾

1968년 12월 10일 진필식 외무부 차관은 주한미국대사관 레스람 공사를 면담하여 1969년 美 회계연도 중에 군 장비 현대화와 대간첩작전 강화를 위한 추가 군사원조를 요청하는 대미각서를 수교하였다. 그 각서에서 한국 정부는 1969년 美 회계연도의 정상 군사원조에 추가하여 한국국방력 유지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의 무장침투 및 도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침투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시급히 필요한 과제임을 호소하였다.¹⁸⁾ 또한 면담 중 진필식 외무부차관은 '브라운

16) "미국방성 국제안전담당 부차관보와의 회담 결과보고(1968.11.2)", 『M16 소총공장 설치 계획 브리핑 원고』, p.2. EA0002602,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17) "미국방성 국제안전담당 부차관보와의 회담 결과보고(1968.11.2)", 위의 글. 당시 계획된 M16 소총의 총 생산목표는 약 60만정으로 69년도부터 생산을 착수하여 연간 12만정을 생산함으로써 1975년에는 M16 소총으로 완전 교체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973년 11월 29일 M16 소총공장이 준공되어 시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제품 생산이 약 4년이나 늦어진 이유를 당시 장상문의 보고서를 통해 유추해 보면, 미국이 한국이 제시한 투자방법, 즉 기계장비는 방위차관으로 하고 원자재 및 부속은 군원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에 언급을 회피했다는 것으로 보아 군원에 대한 부담이 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18) 군원 요청의 주요 내용은 육군은 수송용 및 공격용 헬리콥터 최소 1개 대대, 대침투작전 대대 편성, 8인치 곡사포 대대 추가 등이었고, 해군은 해군함정의 최신형 레이더 교체, DD구축함 및 소형 고속정 추가 등이었다. 공군은 펜텀 대대를 추가하고, 대간첩 작전용 조계기 도입 등이었다. "대미추가 군원 요청 각서(1968.12.11)", EA000261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각서', '반스 서한'에서 약속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레스람 공사가 M-16 소총 소화기 공장 건설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새로운 미국 국회의 성격상 군사원조 증액이 어렵겠다고 하였다. 이에 진필식은 M-16 소총공장 건설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군사원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도를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도 평화유지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의 위협이 상존하고 북한 도발 행위의 격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사전 준비의 완벽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 것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미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줄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진필식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한 한국의 자주국방능력 배양은 예방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하였다.¹⁹⁾ 그의 논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자주국방능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2개 사단 이상의 베트남 파병과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실무자들의 한국군의 현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각서'에 의한 한국군 현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매우 커졌다. 그러던 중 1970년 7월, 주한미군 제7사단의 철수 방침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애그뉴(Spiro Theodore Agnew) 부통령의 방한 회담에서 강력히 항의했으나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방침은 확고하였다. 이어서 나타난 한국군 현대화 문제의 난항(難航)은 주미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극비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⁰⁾ 당시 미 의회와 언론의 동향은 먼저 미 의회의 경우, 下院에서는 한국군 현

19) "대미추가 군원 요청 각서(1968.12.11)", 앞의 글.

20) 1970년 9월 15일 존슨 美 국무차관은 한국군의 현대화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대해 대외 군사원조 예산법안을 통하여 그 일부를 충당하고, 철수미군의 장비이양과 초과 및 잉여 군수장비로 그 일부를 충당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국 주미대사와의 면담에서 밝혔다. 다행스럽게도 美 행정부측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다룸에 있어 장비품목 및 수량을 가지고 토의할 것이며 액수로서 협의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美 행정부는 美 의회지도자와의 사전협의를 대체로 완료되어 행정부로서는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 문제 등 美 의회 내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아직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미간 안보문제에 관한 종합보고(1970.9.21)", EA000290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대화를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上院 위원들은 소위 '신고립주의'에 따라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다. 美 언론계는 일반적으로 주한미군감축에 따라 한국군의 현대화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액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주월한국군의 충당문제와 연계하여 한국 측이 가능한 많은 액수를 획득하고자 'Hard Bargain'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난항(難航)을 겪은 뒤 1970년 10월 14일 한·미 군사회담을 통해 한국 측은 주한미군 제7사단의 철수를 양해하는 대신, 다시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와 장기 군사원조 제공을 핵심으로 한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구체화했다.²¹⁾ 이렇듯 내부의 취약성과 외부의 위협에 따른 자위정신의 각성에서 출발한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능력배양의 단계로 이행되었다.

3. 자주국방정책의 발전(1971~1975)

(1) 대내·외 안보상황과 대응

1970년까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첨예한 긴장이 감돌았던 남북관계는 1971년 말부터 북한의 도발이 격감되어 건국 이래 처음으로 평온에 가까운 상태를 되찾았다.²²⁾ 하지만 국내정세는 반체제 시위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어 민간 수준에서나마 남북대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²³⁾ 그러나 북한이 몇 차례 개최되었던 남북대화를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21)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의 군별 전력증강 내용은 육군은 전차 900대로 증강, 나이키, 호크 등 각종 미사일 확보, M16 소총의 국내생산 등이었고, 해군은 미사일 구축함 2척 증강, 대잠헬기 4대 증강 등이었으며, 공군은 F-4D 18대 도입 등이었다.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 변천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61~170.

22)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 총람』 (서울: 국방대학원, 1972), p.275.

23)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글, 1995, pp.186~189.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1974년 8월 15일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8·15 경축식에서 재일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여 육영수 여사가 피살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1974년 11월, 1975년 3월, 그리고 1978년 10월까지 고랑포, 철원, 판문점 부근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자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²⁴⁾

1971년 7월 28일 오명호 비서관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국 중국접근에 대한 사태분석(3차보고)'를 통해 '국제문제의 내국화(內國化)'에 대해 보고하였다.²⁵⁾ 오명호는 '두 개의 한국'은 거부하기 힘든 국제무드로 되어 버렸고,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강대국 간의 합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거론될 수 있으며 한국이나 북한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책임한 해결책이 나타나기 쉬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북한은 통일문제에 관해서 대내적 일치에 입각하여 확실성과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북한보다는 훨씬 국민적 합의를 얻기 힘들다는 체제상의 결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당시 한국정부의 우려는 첫째,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미국과 중국의 해빙무드를 국제관계로 보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의 해소과정으로 보아 남북한의 직접대화로서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둘째, 국내문제의 불만요인, 즉 부정부패, 빈부격차 심화 등이 용공(容共)의 온상(溫床)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안보 위원회는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북한이 화해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적 대책이었다.²⁶⁾ 이와 더불어 박정희 정부는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24) 국방군사연구소, 『대비정규전사: 1961~1980』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328~341.

25) "미국 중국접근에 대한 사태분석(1971.7.28)", EA000298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26)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1972.8.8)", EA0004603,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그 내용은 ① 국민교육 및 계도 분야로, 국민여론에 혼란이 없도록 7. 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과 정부의 통일방안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총력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한 국민총화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반공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② 외교 분야에서는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안보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모색하고 있었다. 1974년 3월 8일 최규하 외교담당특별보좌관은 박 대통령에게 매월 실시해오던 정례 안보상황 보고회의(안보소회의)와 더불어, 분기별 안보정세에 관한 종합평가보고회의를 추가하고 참석인원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보고하였다.²⁷⁾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 관련 회의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한 점과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도 기존 안보담당위원 이외에 '국가안전보장 회의법'에 규정된 인사, 즉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국방, 외무, 내무장관과 지명 받은 무임소장관(정무장관), 중앙정보국장, 합참의장, 각 군참모총장,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가 모두 참석하여 국가안보관련 제 문제를 토의함으로써 국가지도자와 안보담당자들이 자주국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보문제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한 점이다.

한편 1975년 월남이 공산화된 후 북한의 김일성은 대남 무력침략을 호언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악화되었다. 미국은 주한 미군을 주둔 상한선인 43,000명 선으로 유지하고 전술핵무기의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였다.²⁸⁾ 월남패망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인식은 그의 일기에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고²⁹⁾ 그에 대한 대응은 1976년 발

對 UN 외교를 적극 강화하여 UN은 외세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우리 측 주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UN에 남북한 동시가입이라는 국제적 여론에 비추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對共 분야로, 간첩을 포함한 공산주의 침략자와 이의 동조자들을 종전보다 더욱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정부의 반공정책이 추호도 변동이 없음을 국민에게 과시해야 한다. 또한 북한 측의 동태를 판단하여 이의 대응책을 미리 강구해 둠으로써 선제의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④ 정·전략(政·戰略) 계획 분야로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라는 대통령의 지침을 구체화하는 정·전략(政·戰略)의 단기·중기·장기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7) "안보정세 종합평가 분석보고 절차(1974. 3. 8)", EA0004775,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28)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글, 1995, p.191.

29) '자기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의와 힘이 없는 나라는 생존하지 못한다. 남이 도와주려고 하니 그것만을 믿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망국의 비애를 겪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 조국과 민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하한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와 힘을 배양하지 않으면 망국하고 난 연후에 후회를 해 보았자 후회막급일 것이다.' 정재경, 『위인 박정희』 (서울: 집문당, 1992), pp.261~262.

간한 행정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북한이 월남의 패망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고조시킬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시책의 제1의 목표를 국가안보에 두고 총력안보체제 확립을 추진하였다. 특히, 자국의 안전보장문제를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그러한 사실은 당시의 국제정세 변화추이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 목격하고 느낀 사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³⁰⁾

월남정부의 무조건 항복으로 베트남전쟁이 종식된 후 몇 개월 동안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국가의 총력안보체제가 모든 것에 최우선하는 가치로 부상했다.³¹⁾ 1975년 4월 30일 월남정부가 패망하던 날 고려대학교 교수회에서는 총력안보가 최우선임을 재확인하는 시국결의문을 채택하였다. 5월 2일에는 서울대 교수 900여명이 단과대학별로 국가안보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전국적으로 총력안보결기대회가 잇달아 개최되었다. 또한 재향군인회·광복회 등을 포함한 38개의 단체는 총력안보 국민협의회를 창설하였고, 5월 10일에는 5·16 광장에서 야당 정치지도자들까지 참석하여 140만의 서울시민결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16일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안보결의문을 채택하였다.³²⁾

이와 같이 월남패망과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들로 박정희 정부의 국방정책결정자들의 안보에 관한 위기의식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1975년 4월 29일 박 대통령은 「인도차이나사태에서 얻은 중대한 교훈」이라는 특별담화

30)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6』 (서울: 대한공문사, 1976), pp.6~9.

31) 유윤식, 「자주국방을 위한 정책결정 분석과 우리의 방향 -1970년대 자주국방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40권 제1호, 1997, p.77.

32) 그 요지는 첫째로 북한 도발을 격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며, 둘째로 7·4 공동성명과 6·23 선언을 재확인하고, 셋째로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의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어 5월 18일에는 슬레진저 美 국무장관이 “북한이 남침한다면 즉각적으로 심장부를 공격”한다고 발표하였고, 20일에는 정부와 전국 98개 대학 총 학장 회의에서 전 고교 및 대학에 학생호국단을 결성하고 대학에서 군사교육체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이 가시화되어 6월 9일에는 백령도 상공에 북한의 침범한 사실이 발표되었다. 함영희, 『칠십년대 한국일지』 (서울: 도서출판 청사, 1984), pp.231~252.

를 발표하였다.³³⁾ 그 내용은 '적과의 힘의 균형 유지', '자주국방', '국민총화'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총력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전투준비태세를 재점검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새로운 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³⁴⁾ 이와 더불어 1975년 6월 19일 군경·향토예비군·학도호국단을 제외한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및 직장단위 민방위대를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을 의결하였고, 7월 16일에는 방위세법을 공포하여 자주국방체제 확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³⁵⁾ 또한 1975년에는 1970년대 전반기를 통해 고조되어 온 '자주국방의지'가 방위세를 주채원으로 하는 '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 확보 및 유지를 목표로 하는 전력증강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³⁶⁾

이렇듯 1975년 4월 30일 월남 패망 이후 9월까지 5개월간의 한국 상황은 국방정책결정자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인식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들을 숙고하고 결정하며 발표했던 분주한 기간이었다.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의지는 사회적으로나 정부차원 그리고 군 내부에서나 확고한 상태였다. 또한 시국결의문, 쫓겨대회, 각종 발표문 등을 통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실제적인 조직체로서 총력안보 국민협의회, 학도호국단 결성, 민방위대 설치 등 총력안보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주국방의지는 한층 더 고양되었다.

(2) 자주적 군사전략 수립과 자주국방의지

1971년 9월 육본 작전참모부에 17명으로 구성된 '전쟁기획위원회'가 발

33) 한국일보, "박정희 대통령 특별담화 전문", 1975.4.30일자. 특별담화의 내용은 첫째, 공산주의자들과의 평화협정이나 조약 혹은 긴장완화 등의 모든 거래는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둘째, 한 나라의 국가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확실히 지나갔다. 자기나라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의와 능력배양이 중요하다. 셋째,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는 일단 유사시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34) 임동원, "군사," 『안보문제연구』 (서울: 국방대학원, 1976), pp.239.

35) 함영희, 앞의 글, p.250.

36) 임동원, 앞의 글, p.240.

족되어 육본 B-2 병커에서 3개월간 비밀리에 전쟁대비계획을 연구하였다. 이 결과를 가지고 1972년 2월 육본 작전참모부에 16명으로 구성된 '전쟁기획실'이 창설되어 1년간의 연구 끝에 「태극 '72계획」이라고 명명된 한반도 전역에서의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하였다.³⁷⁾ 이 「태극 '72계획」은 1973년 4월 을지포커스 렌즈 훈련 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이후 '무궁화회의'로 명명된 비밀회의³⁸⁾를 통하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력 운용개념으로 확립되어 갔다.³⁹⁾ 이와 병행하여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을 뒷받침하고자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는 바, 인사기획국 및 군수기획국을 해체하고 전략기획국 및 동원국을 신설하였다.⁴⁰⁾

당시 자주적 군사전략 수립에 있어 일익을 담당했던 인물로 임동원을 꼽을 수 있다. 1970년 임동원은 '자주국방제도 연구를 위한 이스라엘 국방제도 연구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이스라엘에 파견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시찰하며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을 탐구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지도층 인사들과 군 간부들에게 당시 촬영했던 슬라이드 사진들과 함께 이스라엘 국방제도 시찰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보고는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 군에서는 '이스라엘 본보기 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병형 장군이 합동참모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주국방계획의 수립은 착수되었다. 그리고 임동원은 1973년부터 3년간 합동참모본부에서 국가안보정책과 자주국방계획을 마련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는 한국군 최초의 '기본군사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이후 8개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주적 군사력 건설계획'이 마련되었다. 그것이 바로 울곡의 유비무환(有備無患)정신을 기리며 작성한 코드명 '울곡계획'이었다.⁴¹⁾

37) 합동참모본부, 『무궁화회의 약사』 (서울: 광진문화사, 1984), p.3.

38) '무궁화회의'는 자주국방과 자주적 전략구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독자적 전쟁기획인 「태극 '72계획」에 대한 장성급 주요지휘관·참모회의였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 안보환경과 불편한 대미관계로 인하여 가칭으로 사용되었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 조직/회의 변천사", 『합참』 제41호, 2009, p.25.

39)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4집 (서울: 육군본부, 1984), pp.106~107.

40) "합동참모본부 개편계획 보고(1973.3.15)", EA0004663,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사료.

41)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서울: 중앙 books, 2008), pp.146~147.

한편 한국 군사문제연구소장 김홍철은 1974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제 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한 제16차 연차대회에 참석한 후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군사전략적 측면, 무기생산 및 군수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었다. 먼저 군사전략적 측면은 1973년 10월에 발생했던 4차 중동전의 결과 미래전은 중소형 유도탄(대전차 및 대공 유도탄)이 주 무기로 등장하여 국지전쟁에서는 약소국이라 할 지라도 일시적으로 큰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무기생산 및 군수정책적 측면으로 4차 중동전 이후 중동지역 국가들의 군비경쟁과 산유국의 경제력 등과 관련하여 향후 10년간의 주요 무기 생산국들이 생산 중점을 중소형 비핵 유도탄 분야에 둘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의 안보문제도 한반도의 입지적 여건과 항공기, 전차 화력 면에서 우세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계속적인 군사력 균형유지의 불가피성 등에 가장 부합되는 전략개념 및 군사정책의 방향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군의 무기체계 도입을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세계 주요무기 생산국들의 무기생산 및 수급상황에 대한 체계적 연구분석 및 현황과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⁴²⁾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박정희 정부가 한국군의 자주적인 군사전략 수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히 실제 중동전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 적합한 무기체계 도입과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과 이러한 보고들이 안보전문 연구가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었다는 점이다.

(3) 자주국방능력 배양 노력

1) 병기·전차·함정 생산능력의 자주화 추진

1972년 9월 21일 오원철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형 A 설계'라는 보고

42)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제16차 연차대회 참석결과 보고(1974.12.10)", EA0004818,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를 하였다. 그 내용은 한국형 7.62mm 기관총의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양산 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으로, 72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1973년부터 제작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⁴³⁾ 이와 더불어 1973년 1월 23일 오원철은 병기 생산 담당업체수와 병기생산능력을 도표화한 '병기생산능력'을 보고하였다.⁴⁴⁾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73년 11월 29일 M-16 소총공장이 건립되어 시제품이 양산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한국의 병기생산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표 1〉 병기 생산 능력

병 기 명	담당업체수	병기생산능력
수류탄	8개	42만개
대인지뢰	5개	3만6천개
대전차지뢰	3개	3만개
60mm 박격포	8개	900정
81mm 박격포	8개	600정
3.5" 로켓포	4개	1,200정
유탄발사기	6개	2,400정

1973년 11월 24일 박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 Agency for Defence Development)가 주관한 시제화포에 대한 시험 평가결과를 보고 받았다.⁴⁵⁾ 시험 화포는 105mm 곡사포, 4.2" 박격포, 106mm 무반동포였

43) 첫째, 반동이 적고 명중정도가 양호하다. 이 특성은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발사할 때 총신을 전방으로 잡아당기는 작용을 해 줌으로써 반동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총신의 반동이 적어 명중 정도가 양호하므로 총신의 내구성도 양호하다. 셋째, 다수탄 연속발사로서 약실 온도가 상승하여도 기능불량을 일으키지 않는다. 넷째, 구조가 간단하여 양산시 교환성을 유지하기 쉽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 소총과 비교했을 때 이외에도 총 11가지의 장점이 있었다. "한국형 'A' 설계(1972.9.21)", EA0004622,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44) "병기생산능력보고", 1973, EA000465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45) "시제화포 종합성능 시험 결과(1973.11.24)", EA0004753,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다. 평가결과는 시험화포가 균원포에 비하여 큰 손색없이 양호하고 1974년도에 개발생산 예정이며 노후된 균원포에 비하여 명중도가 극히 양호하고 구성부품의 제 기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 등이었다. 또한 1975년 11월 1일에는 국과연에서 특수탄약 및 시제병기 시험사격 결과를 보고하였다.⁴⁶⁾ 품목은 자체 생산 시제품인 20mm 발칸포, M-203 유탄발사기와 성능 개조한 105mm 전차포였다.

이러한 자체 병기생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병기생산능력 확충은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경제력과 美 군원에 의존해야만 했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자주국방의지'가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김정렴은 당시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에 관한 지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⁴⁷⁾ "자주국방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美측 방침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처지를 빨리 초월해야 하겠다. 자주국방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므로 경제가 잘 돼야 한다. 첨단무기는 고가이므로 외화는 신종 고성능 무기 도입에만 충당토록 하고 기본병기는 하루 빨리 국산화해야겠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능력'은 국군현대화계획과 함께 병기의 자체생산 능력 확보를 시작으로, 이후 '울곡사업'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74년 7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된 '전차개발계획' 내용을 살펴보자.⁴⁸⁾ 먼저 전차개발의 목표는 전차의 국내생산능력 확보와 보유 전차와 장갑차의 정비유지능력 확보였다. 개발방침은 민간 중공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민간 대 민간의 기술제휴방식에 의해 추진하고, 군의 소요와 정부의 재정계획에 조화되도록 산업규모를 확정하며 차관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차의 국산화 단계를 '74년부터 '78년까지 기초능력배양단계, '79년부터 '81년까지 조립생산단계, 그리고 '82년부터 완전

46) "특수탄약 및 시제병기 시사결과보고(1975.11.1)", EA000486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47) 이재전, "울곡사업과 자주국방", 『국방일보』 제1화 온고지신, 2003년 10월 14일자.

48) "전차개발계획(1974.7.13)", EA0004802,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생산단계로 정하였다. 또한 전차의 개발과 병행하여 포탄의 개발을 병행한다는 것이었다. 전차의 유지 및 증강계획은 1980년대까지 전차 보유수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차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1차로 M-48전차를 M-60급으로 개조하며 개조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품을 M-47 전차 유지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또한 관련 기반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자주적인 전차생산능력의 기초단계를 구축하는 이점을 확보하려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한국군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M-60 전차의 공동생산량을 130대로 예상하였고 장차 1980년대 이후로는 한국의 독자적인 전차를 개발하는 것을 추가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1975년 7월 7일 박 대통령은 전차의 국내생산에 관한 추가 내용을 지시하였다.⁴⁹⁾ 그 내용은 1978년 말까지 국내에서 성능이 우수한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완비하고, 이를 위해 전차를 구성하는 각 부품을 가공 조립하는 모체공장을 중심으로 육성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모체공장의 공장시설과 병행하여 부분품 제조업체도 전차부분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신설하고 생산업체를 민영으로 하되 모체공장은 창원 입주의 대형구경 공장이 담당토록 하였다. 그리고 모체공장 및 부분품공장은 필요시 미국, 일본, 유럽의 생산회사와 기술제휴하며 기술 수집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차개발실을 강화하여 1978년도 한국형 전차 1대를 시제 생산함으로써 여기서 수집된 기술을 업계에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은 한국의 자립적인 함정생산에 관해서도 지시하였다.⁵⁰⁾ 그것은 자립 국방태세 구축을 위해 국방부는 해군의 작전개념과 국내 조선능력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건조하여야 할 적격형(適格型)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국내 기존 조선업체 중 적격 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해군과 공동으로 해외 함정 건조실태 및 기술제휴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국내 함정 건조사업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추가된 지시는 신형함의 건조와 동시에 현 구축함을 개조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였다. 이에 따라 해군본부에서는 '한국형 전투함 건조 및 DD 현대화계획'을 수립 보고하였

49) "전차 생산에 관한 지시(1975.7.7)", EA000023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50) "함정생산(1975.7.7)", EA0000229,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다.⁵¹⁾ 그 내용은 전투함의 노후화 실태와 DD 7척의 현대화를 위한 무장 교체 및 1,500톤급 한국형 전투함(이후 울산급으로 분류됨) 건조에 관한 세부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전차와 함정생산의 자주화 모색을 통해 자립적인 국방능력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의 경제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이후에는 국산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차와 함정을 개발함으로써 자주적인 국방능력 확보에 일관되게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한국의 독자적인 방산능력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추진

1974년 12월 18일에 경제2 수석비서관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을 방산협력국으로 지정하고 그 협력방안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⁵²⁾ 이스라엘을 방산협력국으로 주목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6일 전쟁과 10월 전쟁 등의 중동전쟁에서 근대전의 경험을 갖고 있었고 아랍 국가들과 석유 문제로 대치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상시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신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방산협력과 병행하여 아랍국과들과도 협력을 추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랍국들의 반발을 상쇄하고, 정세가 변동될 때마다 정책을 변경하는 폐단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었다. 협조조직 및 방법으로 對 이스라엘 방산협력의 재외공관은 이태리 대사관으로 하고 업무 담당관으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기술자 약 1,000명을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담당관들은 이스라엘을 수시로 방문하여 정보 수집을 실시하고, 이태리 대사관을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의 방

51) “한국형 전투함 건조 및 DD 현대화계획(1976.6.10)”, EA000489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52) “이스라엘과의 협조방안(1974.12.18)”, EA000481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산업무를 위한 정보센터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또한 군에 담당관을 두고 담당관 또는 미국유학시의 동창관계 등의 친분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만들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또는 이스라엘 상대자와 접촉을 가지도록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영국, 일본과도 방산협력을 추진하였다. 영국과는 105mm 신형포, 전차, 그리고 영국에서 개최되었던 해군 장비 전람회 방문을 통한 해군 무장 및 장비 협력 등을 실시하였다.⁵³⁾ 일본과는 일본방위청 기술연구본부와 한국의 ADD(Agency for Defence Development)간에 각종 무장에 관한 연구교류를 실시하였다. 무장은 신형 ST-B 전차, '하야시오'형 잠수함, PT-11형 어뢰정, 105mm 전차포 등이었다. 또한 중요 통신전자기계의 공동생산과 개발을 협의하였고 일본 방산회사와 직접 협력을 추진하였는데, 호크발사대 보호천막, 적외선을 이용한 탐조등과 야시장비 등에 관한 방산협력을 실시하였다.⁵⁴⁾

1974년 1월경에는 미국의 방산업체인 록히드(Lockheed)사가 항공기 제작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합작투자 또는 기술제휴를 하고 싶다고 제의하였다. 이의 배경은 1973년 9월 11일 한·미 안보회담 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미국 방산업체와의 민간 차원의 협력 추진의사를 타진하였고 美 클레멘즈 차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경험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개발도상국으로는 한국만이 방위산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박정희 정부 또한 한국에서의 수요 증가와 동남아 시장에 수출을 목표로 한다면 수출산업화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⁵⁵⁾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70년 초부터 한국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긴밀한 방산협력 및 유대관계 구축을 통해 '이스라엘 본받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53) "영국대사와 방산협약(1975. 8.13)", EA0004854,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54) "일본과의 특수협력(1975.6.13)", EA0004846,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사료. : "일본 회사와 특수분야 기술협력(1976. 4.15).", EA0004872,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55) "미국 '록키드' 회사의 투자 제의(1974.1.23.)", EA000477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그리고 아랍국가와도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세가 변동될 것에 대비했던 점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한 전략적 판단이었고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의지가 분명히 들어나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방산협력을 한 국가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여러 국가들이 보유한 무기체계의 장단점과 한국의 전략에 맞는 무기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들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유도탄, 핵무기 개발과 자주국방능력 확보 노력

독자적 방위산업 육성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와 더불어 핵무기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유도탄 개발사업과 동시에 핵무기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본격적인 한국의 유도탄 개발은 1971년 12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오원철 청와대 경제2수석에게 유도탄개발 지시를 내림으로써 시작되었다.⁵⁶⁾ 이듬해 4월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유도탄 개발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1972년 5월 1일 개발 계획단이 편성되어 1973년 1월에 “항공공업 육성계획”을 만들었으며⁵⁷⁾ 1974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유도탄 개발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가함으로써 한국형 미사일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최초에는 사정거리 500km의 미국 퍼싱급 미사일을 1978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미국의 도움 없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76년에 중단하였다. 그 후 이 사업은 1단계로 기존 무기체계를 모방개발하고, 2단계로 모방 개발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실시하며, 3단계로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에 재착수하여 1977년부터 미국의 나이키 허큘러스(Nike-Hercules)를 모델로 한 지대지 유도탄 기본형의 개발에 착수하였다.⁵⁸⁾

56) 김정렴, 『아, 박정희: 김정렴 정치회고록』 (서울: 중앙 M&B, 1997), p.297.

57) 이재전, “박대통령과 국과연,” 『국방일보』 제1화 은고지신, 2003년 10월 18일자. 당시에는 대외적으로 ‘유도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항공산업’이라고 불렀다.

58)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약사: 제1권』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1989), p.146.

1973년 2월 15일 오원철은 국방부에서 상신한 '방공유도탄 개조 사업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검토 보고하였다. 그 사업계획의 목적은 당시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공대공 방공유도탄 Side Winder(AIM-9B)의 성능이 제한되어 폭격기에 대한 요격능력밖에 없으므로 이를 신형(AIM-9E)으로 개조하여 적 전투기에 대한 요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검토보고서에는 AIM-9E의 장점을 열거하면서 북한 MIG-21의 요격까지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오원철은 국방부의 이와 같은 보고를 재검토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항공기의 고속화와 복잡화에 따라 방공 유도탄은 AIM-9B에서 9E, 9H, 9J, 9L 등으로 개조해 나가고 있지만 실제 전투에서 별로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공군에서 개조하고자 하는 9E형도 신형이 아니고 9B를 개조한 것에 불과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오원철은 공군의 방공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대공 유도탄 보유를 위해서는 보유 유도탄의 개조가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육성계획(유도탄개발 계획)과 병행하여 최신의 모델을 선정하고 미국의 개발연구기관 또는 생산회사와의 특허 생산제를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다.⁵⁹⁾

오원철의 이러한 판단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유도탄 개발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고, 유도탄 개발의 자주화를 모색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4년 12월 12일에 대천 美軍 특수시험장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자체 개발한 무유도(無誘導) 로켓 '홍능 1호'의 비행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⁶⁰⁾ 이후 한국은 1978년 9월 26일 충남 서산군 안흥시험장에서 한국형 장거리 지대지유도탄(백곰)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7번째 유도탄 개발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⁶¹⁾ 또한 유도탄 개발을 통한 기술향상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이후

59) "방공유도탄 개조 사업 계획(1973.2.15)", EA0004655,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60) "무유도 로켓 비행시험(1974.12.20)", EA0004822,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61)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지난 9월 유도탄 시험성공으로 세계 7번째 유도탄 개발국이 되어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이룩하는 획기적 진전을 기록함으로써, 북괴보다 10년 늦은 1970년 초반부터 방위산업 개발에 착수한 한국이 북괴를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북괴가 생산하지 못하는 핵무기운반체를 보유한 것은 안보상 큰 의미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능개량은 물론 독자적인 개발사업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다연장로켓의 개발, 양산이 실현되었으며, 함대함유도탄과 기타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음은 당시 경제 제2수석비서관실의 핵심참모였던 김광모 비서관의 증언이다.

오 수석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경제 2수석실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돼 오 수석을 부르더니, “주한미군 철수로 한국의 안보가 대단히 불안해. 미국한테 밤낮 눌러서는 안 되겠어. 언젠가는 도와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철군해버리니 언젠까지 미국한테 팔지만 받아야 하는지... 이제는 좀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약소국가로서 큰소리 칠 수 있는 게 뭐 없겠소.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큰 소리를 뽐뽐 치고 있는데 말이야. 우리도 핵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라고 묻더랍니다.⁶²⁾

위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과정에서 나타난 안보불안과 對美 불신을 계기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⁶³⁾ 또한 박 대통령은 만약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하거나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에 대북한 억제력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핵능력을 건설하기를 원했다.⁶⁴⁾ 그러

국방부, 『조국의 현실과 전망: 자주국방의 분수령에서』, 1978, p.147. 또한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가홍보원에 영화제작을 지시하였는데, 그 해설의 내용을 보면 자주국방의지와 능력확보에 대한 자신감과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관한 노력이 절실히 느껴진다. “부전승의 길”, BA0792816,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사료.

62)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실록 박정희』 (서울: 중앙 M&B, 1998), pp.260~261.

63) 조철호, 앞의 글, 2007, p.360.

64) 한용섭,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 진보 대 보수의 논쟁을 넘어서 -」, 한국정치외교사학회·사단법인 아셈연구원 편, 『한국 현대 정치외교의 주요 쟁점과 논의』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9), p.105. ; 하영선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원인을 총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1970년 7월의 주한미군철수 계획이 한국에 통고되었을 때이고, 두 번째 시기는 1975년 베트남이 패망했을 때였고, 마지막 시기는 1977년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 완전철수가 통고되었던 시기였다.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1), pp.148~150.

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은 핵무기를 약소국의 입장에서 자주적인 국방능력 확보에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무기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유도탄 개발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시작되었는데 1972년 9월 8일 오원철 제2경제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원자 핵연료 개발 계획」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의 종류 및 우리의 개발 방향', '핵무기의 비교(도표)', '우리나라의 핵물질 보유를 위한 개발 방향', '고순도 플루토늄 생산 방안 비교(도표)' 등과 결론 순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 비밀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종합 결론지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플루토늄탄을 개발한다. 둘째, 1973년도부터 과학기술처(원자력연구소)와 상공부(한국전력)가 협동으로 핵연료 기본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기초작업을 수행한다. 셋째, 원자력연구소는 상기 목적에 맞도록 개편·보강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핵연료인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목표시기는 1980년대 초반으로 잡혔다.⁶⁵⁾

1972년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은 프랑스와 재처리 기술 및 시설도입 교섭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원철의 주도하에 1973년부터는 고순도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캐나다에서 연구용 원자로로 NRX형을, 중수로 원자로는 CANDU(Canada Deuterium Uranium)형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재처리 시설은 프랑스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상고뱅(SGN)사와 협상을 벌였다. 이후 1975년 4월에 원자력연구소와 상고뱅(SGN)사 사이에 재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기술용역 및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⁶⁶⁾

65) 오동룡, "박정희의 원자폭탄 개발 비밀 계획서 원문 발굴", 『월간조선』 (조선일보사, 2003년 8월호), pp.190~199. 이 보고서가 핵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미뤄 박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최초 보고임을 짐작케 한다 : 한편 핵무기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 초반으로 짐작된다. 그 근거는 미국 하원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들 수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1970년 말 국방과학연구소와 무기개발위원회라는 2개의 군사기구를 설립하였고 무기개발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핵무기개발을 만장일치로 동의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하영선, 전계서, pp.148~149.

66) 조철호, 「박정희 핵 외교와 한미관계 변화」,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0), p.47. : 오동룡, 전계서, pp.194~195.

이러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1974년 5월 인도의 핵실험으로 결정적인 차질을 빚게 되었다.⁶⁷⁾ 이후 한국은 미국의 국무부와 의회의 압력으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도 비준했다. 미국의 방해로 재처리 시설 도입과 CANDU형 원자로 도입이 좌절된 1976년에 박 대통령은 김정렴 비서실장과 오원철 수석에게 일본식으로 원자력산업을 발전시키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는 일본은 필요시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처럼 원자력 산업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판단을 통해 한국은 원자 기술의 자립을 추구하여, 3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4~6 위권의 원자력 대국이 되었다.⁶⁸⁾

이러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대북 억제용이나 대미 협상용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약소국의 국가지도자로서 강대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힘'을 기르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의 특수성은 박정희의 자주국방사상을 잘 표현해 주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1981년 10월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국내·외에 공개하려고 하였고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⁶⁹⁾

4. 자주국방정책의 심화(1976~1979)

(1) 대내·외 안보상황과 대응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은 UN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67)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115.

68) 오동룡, 앞의 글, pp.196~197.

69) 한국일보, “박정희, 81년 핵무기 공개 후 전격 하야할 생각이었다”, 2010년 11월 7일자.

소집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재도발 시에는 강경한 보복대응의지를 천명하였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는 F-4 전투기 1개 대대와 미국 본토의 최신에 F-111 전투기 1개 대대, 그리고 항공모함 미드웨이함을 비롯한 전투전단 등을 한국에 급파하여 강경하게 대응하였다.⁷⁰⁾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1974년 대통령 저격사건 미수, 땅굴 발견, 월남패망 등과 관련하여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었다.

한편 1976년 후반부터 집권한 미국의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은 1978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주한미군의 공군을 제외하고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은 1977년 2월 26일자로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서한에서 박정희는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이 변함이 없고 우리의 자주국방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현 단계에서 상당기간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변동이 없는 것이 소망스러우며,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과 문제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안전과 민족의 생존 확보를 위해 기본권의 일부 유보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변하였다. 또한 미군의 주둔 없이도 자력방위능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4~5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여기에 미국의 무기판매 및 장비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⁷¹⁾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 한국의 주요 고위층 인사들 또한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자주국방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미국의 확고한 안보태세를 요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김종필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이 4~5년 더 주둔하기를 원하며, 철군과 인권에 관한 미 행정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근본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렴 비서실장의

70) 이재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국방일보』 제1화 온고지신, 2003년 11월 18일자.

71) 양승함 외, 『한국대통령 통치사료집V-박정희(5): 주한미군철수』 (서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2010), p.12.

경우에는 철군에 따르는 보상 문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박동진 외무장관은 주한미군의 철수, 북한과의 접촉, 인권문제의 강조 등은 미국의 한국안보에 대한 확약이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브레진스키(Zbigniew Kazimierz Brzezinski) 안보보좌관, 벤스(Cyrus R. Vance)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한반도 안보에 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타진했다.⁷²⁾

(2) 전력증강 연구위원회 창설과 장기 군사전략 모색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의지를 바탕으로 한 노력의 일례로서 전력증강 연구위원회의 운용을 들 수 있다. 1977년 국방부는 훈령 제222호⁷³⁾로서 '필승태세 확립지시'를 하달하였고 육군은 이 지시에 근거하여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39호('77. 9. 1)에 지휘부의 직속기관으로 전력증강 연구위원회(통상명칭: 80위원회)를 창설하였다.⁷⁴⁾ 위원회 창설된 초기에는 육군의 전력증강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면문제 중에서 주요사업을 선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만 전념하였으나 1978년부터는 보다 장기적인 육군의 정책발전구상을 시도하여 정책발전적 연구사업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980년대의 미래를 전망하고 주변정세와 북한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하여 각 분야별로 장기정책 발전방향과 개념을 연구하는 한편, 고급간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육군본부 각

72) 양승함 외, 위의 글, p.14.

73) 당시 국방부 훈령 제222호의 취지는 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라는 명제 아래 군의 지상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① 적에 관한 연구, ② 군 구조 및 부대발전, ③ 무기체계의 선정과 개발, ④ 교리의 토착화와 교육훈련 등의 네 가지 당면과제를 설정하고 강력한 시행을 촉구하였다. 육군본부, 『육군 40년 발전사: 1945~1985』(서울: 육군본부, 1989), pp.343~344.

74) 이 기구는 장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고 1980년대에 더욱 향상될 한국의 국제적 입지에 적합한 강력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족되었으며 육군이 추진 중인 전력증강계획과 방위산업 육성을 비롯한 제반 전력보완사업을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발전방향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게 되었다. 육군본부, 전계서, 1989, p.343.

참모부의 연구안을 종합하여 80년대 육군의 정책발전 방향⁷⁵⁾으로 성안하였다. 특히 전력증강 위원회에서는 육군의 중기 전략개념과 전력증강을 포함한 각종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대를 목표년대로 하여 향후 20여년 간 적용될 「육군장기전략구상」이 수립되었다.⁷⁶⁾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이 구상이 종전과는 달리 주적을 북한으로 하되, 가상 적을 중국으로 설정하여 '적'의 범위를 주변 강대국으로 확장하였으며 이에 대응할 한국군의 군사전략 유형을 억제전략, 방위전략, 공세전략 및 보복전략으로 분류하여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전략 개념으로 억제전략의 구상에 목표를 두었으나 1990년대에는 한국의 국방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시 군사력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였다는 점과 위협 분석의 기초인 '적'의 범위를 중국까지 확대함에 따라 한국군의 방위능력을 한반도 영역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륙작전능력과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⁷⁷⁾ 이후 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당시의 기구만으로는 과학적인 분석과 지휘부의 의사결정 보좌기능이 제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전략목표 및 개념의 정립과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

75) 「80년대 육군정책 발전방향」은 1979.4.12일에 발간되었고 지금은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에 존안문서로 보관중이다.

76) 전력증강 연구위원회는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우선 육군의 전반적인 상황과 당면문제를 파악하고 전력증강을 위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1977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육군본부 일반참모부를 순회하면서 일반상황을 파악하였고 9월 29일에는 정보사령부를 방문하여 북한군에 대한 주요첩보, 무기체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였다. 그 결과 육군이 앞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50개의 주요문제를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각 참모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26개 과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기전략 구상을 비롯한 지상무기체계 연구, 군수지원기구 및 체제 연구, 화생방 방어태세의 개선 등 24개 주제를 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하고 과제별로 연구관을 편성 분담시켜 본격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육군본부, 앞의 글, 1989, pp.344~345. 한편 「육군장기전략」 구상은 1977년 후반에 전력증강 연구위원회의 주무관 임동원 준장이 작성하여 1978년 2월 9일 육군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쳐 2월 23일 육군참모총장의 연은 후 군사 I급 비밀로 분류되어 2월 24일 기획관리참모부로 이관되었다. 육군본부, 앞의 글, 1989, p.265.

77) 홍준기, 「한국 자주국방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04). pp.23~24.

구로서 1980년 1월 1일부로 전략기획참모부가 편성되어 전력증강 연구위원회는 발전적인 해체를 하게 되었다.⁷⁸⁾

이러한 전력증강 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의지를 바탕으로 자주국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을 정립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기획을 수립했던 사실은 국방기획능력 차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즉 당시의 기획했던 군사력은 이후 1980년대를 거쳐 점차 확보되어 갔고 현재 한국군 전력의 대부분은 당시의 전략 개념에 의해 확보된 것임을 상기할 때 당시의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들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3) 합동전략목표 기획서와 자주국방능력 확보 노력

1978년 6월에 합동참모본부는 「1980년도 합동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였다.⁷⁹⁾ 이 내용에는 정세판단을 통한 정보 분석, 군사전략 개념, 전력증강 우선순위, 각 군별 전력증강 목표와 개념 등이 명시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의 국제안보상황이 주변 강대국에 의한 국익 추구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주국방의 촉진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판단을 통해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당시 군사전략개념의 주요 요지는 평시에는 자주적인 방위능력을 확보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휴전선에서 적을 격멸하고 수도권을 고수한다는 것 등이었다.⁸⁰⁾ 이에 따른 기본정책으로 첫째, 자주적 조기

78) 전력증강위원회는 2년 4개월 동안 유지되었으며 기간 중에 연구된 과제는 1980년대 육군 정책발전방향에 포함되어 있는 26개 과제를 비롯하여 총 53개 과제에 달한다. 이것을 성격별로 분류하면 상기 26개 과제를 제외하고 전략정책분야가 6개 과제, 전술작전 및 교육 분야가 7개 과제, 무기체계 및 부대구조 조정분야가 6개 과제, 전투기술, 인사, 군수 및 기타분야가 8개 과제였다. 육군본부, 앞의 글, 1989, pp.345~346.

79) 「80 합동전략목표기획서」는 1978년 6월 21일 제9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제1차 합동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다. 현재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에서 존안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80) 육군본부, 전게서, 1989, pp.264~265. 평시전략은 '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인 방위능력을 정비 강화하고 유사시 즉각 동원 확장할 수 있는 강

경보체제를 강화하고, 둘째, 안보 및 심리전태세를 강화하며 셋째,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고 넷째, 자주적인 군수지원태세를 확립하는 것 등의 총 8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후반 한국의 자주국방능력은 정세판단, 전략수립과 기본정책으로 추진되면서 꾸준히 신장되었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능력 확보를 위해 율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방산협력을 통한 자립적 방위력 건설 능력 확보, 국과연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례로, 1977년 12월 12일 경제2수석비서관실에서는 'F-16 전투기 확보방안'에 관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⁸¹⁾ 그 내용은 미국의 생산업체 제너럴 다이내믹社(General Dynamic co.)가 F-16 공급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정부에서 F-16 확보방안에 대해 제시한 것이었다. 먼저 G.D社의 추진상황 설명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 한국 측에서 F-16의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것에 대해 G.D社가 막후 교섭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F-16 공급이 1982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력에 따라 단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에서 제의한 F-16 확보방안은 첫째, 한국으로서는 F-16의 구매도 중요하지만 항공공업의 육성도 똑같이 중요하므로 F-16의 공급과 국내 항공 공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둘째, 500MD 헬기 생산과 같이 초기에는 자립 생산하며 일부 부품은 국산화 되어야 하며, 셋째, 유럽 국가들의 유명한 항공기 회사로부터 항공기 공업의 국내 육성 제의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력한 상비전력을 확보한다. ②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하여 적의 기도를 예상하고 전방지역에 중점을 두고 전투부대를 전개하여 완충능력을 보장한다. ③ 전국토의 기지화개념을 발전시키고 후방지역 방위기능을 통합하여 적의 비정규전 활동을 억지 분쇄한다. ④ 적의 제한된 공격에 대해서는 즉각 격퇴 및 응분의 보복조치를 취한다.' 등이었다. **전시전략**은 ① 적의 전면 남침 시 초전에는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여 현 전선에서 적을 억지 격멸하고 여하한 상황 하에서도 임전불퇴의 초전필승정신으로 수도권을 고수하고 후방지역의 방위기능을 통합하여 적의 제2전선 형성을 거부하며 전쟁지속체제를 확립한다. ② 반격시에는 북한을 수복하기 위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기습적인 반격과 특공작전으로 신속히 안주-영흥선을 확보하고 중·소가 개입하기 전에 한국·중국 경계선까지 진격, 실지를 회복한다.

81) "F-16 전투기 확보(1977.12.12)", EA0004916,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사료.

실제로 F-16이 도입된 것은 1986년 피스브릿지(Peace Bridge)사업을 통해서였지만, 중요한 것은 박정희 정부가 미국 회사와의 협의 시에도 국내 항공공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협의 조건으로 제의하였다는 점이다. 즉 자주국방능력 확보가 최우선의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5. 맺 음 말

본 연구를 통해 1970년대 한국의 자주국방정책은 대내외 위협 속에서 국방을 책임졌던 국가지도자와 실무담당자,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주국방정책 모색기(1968~1970)는 '의지'를 중심으로 '능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였다. 자주국방의지 측면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연구하였고 국가 지도부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자주국방능력 측면에서는 국군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시 자주국방논리의 경제성과 자신감을 표출하여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자주국방정책 발전기(1971~1975)에는 총력안보운동을 통한 전 국민의 국방의지를 강화하였고 울곡사업 추진 등으로 국방능력 확보에 초석을 마련한 시기였다. 즉 자주국방의지와 능력이 동시에 강화, 발전된 시기였다. '의지' 측면에서는 월남의 공산화에 따른 총력안보체제가 강화되었고 국가 지도자 뿐만 아니라 지도층, 그리고 국민들의 자주국방의지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또한 자주국방정책과 자주적 군사전략을 모색하였고 우방국과의 전략적 방산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자주국방능력 기반 확충에 노력하였다. 국가지도자와 군사문제 전문가가 자주적 군사전략 수립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능력' 측면에서는 병기와 전차, 함정에 이르기까지 생산능력의 자주화를 모색하였고 유도탄 개발을

통해 전쟁억제능력 확보에 노력하였다. 특히 율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주국방능력 향상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었다.

자주국방정책 심화기(1976~1979)는 한국의 자주국방정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된 시기로, 이후 1980년대에 추진된 '한국 방위의 한국화'의 바로 전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 자주국방의지는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따라 더욱 확고해지면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을 위한 노력으로 표출되었다. 전력증강 연구위원회를 창설하여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자주적인 군사전략 수립체계를 완벽히 갖추게 되었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1차 율곡사업의 성과가 결실을 맺음으로써 자주국방능력이 한층 더 보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이 약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기본 병기의 자체 생산, 전차 제작 및 함정 건조, 유도탄 및 핵무기 개발 등 자주국방태세의 기반을 확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 가서는 자주국방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다. 즉, 1970년대 초반 자주국방 개념이었던 '주한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단독 도발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자주적인 능력의 확보와 전략의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전략무기를 확보하는 방안까지 구상하였다. 결론적으로 1970년대 한국 자주국방정책의 핵심은 먼저, 자주국방의지를 바탕으로 자주국방능력을 확보하여 대북 전쟁억제능력을 신장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주변 강대국들을 미래 잠재적국으로 상정하고 그들의 도발에 대항할 수 있는 자주국방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처럼 박정희 대통령이나 특정인물의 업적들로 자주국방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국가안보나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실무자들의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오늘날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안보는 국가지도자와 엘리트,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와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0. 12. 30, 심사수정일 : 2011. 1. 24, 게재확정일 : 2011. 2. 1.)

주제어 : 국가안보, 자주국방정책, 자주국방의지, 자주국방능력, 한국군 현대화 계획, 울곡계획, 방산협력, 유도탄 및 핵무기 개발, 전력증강연구위원회, 합동전략목표기획서

<ABSTRACT>

A Study on the Self-Reliant Defense Policy of the ROK in the 1970s

Park, Bong-su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Self-Reliant Defense Policy of the ROK in the 1970s. In this article, I divided the Self-Reliant Defense Policy of the ROK in the 1970s into the groping, development and deepening periods, and appraised the evolution and peculiarity.

Groping Period(1968~1970) was the term that prepared the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y centering around the Self-Reliant Defense willing. In this period, the ROK actively evaluated national security meeting and formed strategic sympathy of the national leaders. Development Period(1971~1975) was the term that strengthened the Self-Reliant Defense willing through all-out national security and prepared the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y through the *Yul Gok* projects. Also the ROK tried to produced arms, tanks, combat ships by oneself and developed missile, nuclear weapon to guarantee war deterrence. Deepening Period(1976~1979) was the term that the Self-Reliant Defense Policy of the ROK was actively leaded. In this period, the ROK established the Fighting Power Reinforcement Research Committee to found long term plan to develop fighting power reinforcement. And the ROK made establishment systems of self reliant military strategy.

Through this research, I confirmed that the ROK had tried to set up the Self-Reliant Defense posture for about 10 years. Specially in 1970s the latter half, the ROK had tried to prepared military strategy and strategic weapons to cope with not only the North Korea's threat but also

neighboring countries' threat. Also I was able to confirm importance of national leader group's security sympathy and the people's support. In conclusion, through this research I drew implication that national leader group, the people's sympathy is important to ensure national security.

Key Words : Self-Reliant Defense, Self-Reliant Defense Policy, Self-Reliant Defense Willing,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y, *Yul Gok* project, Security Strategic Sympathy, All-out National Security, The Fighting Power Reinforcement Research Committee, Self Reliant Military Strategy, National Security

